

정 총리, 'LH 투기 의혹' 국세청 등 참여 '특수본' 설치 지시 "불법 투기행위 철저히 규명하라"

이번주 중 국토부·LH 직원
1차 조사 발표... 丁 "신속 수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경찰에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최창원 국무총리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고,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 5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총 1만4000여명이다.

다만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하고,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번주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즉시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울러 정 총리는 국토부가 조사 중인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 엄정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간 설립장산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경정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

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능자가 될 것"이라며 수사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에게는 "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정상화의 조화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뉴스

"기소-수사권 분리, 나아갈 방향"

문 대통령,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큰 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법무·행안부 업무보고는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1월21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관계 부처(1월25일), 국토교통부(2월16일)에 이은 네 번째 대면 형태의 업무보고다. 권력기관 개혁이 자리 잡는 첫해인 만큼,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화상 회의 형태로 업무보고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다. 두 부처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

"피해 입은 주민들의 치유회복 도울 것"

민주 윤후덕·우원식 의원
익산 장점마을 전격 방문
김수흥 의원 호소에 성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일행이 8일 집단 암 발병 참가가 벌어진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을 방문했다.

국회 기획재정부 윤후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집단 암 발병 참가가 벌어진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에 8일 전격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획재정부)이 장점마을을 참사 해결을 위해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눈물로 호소한 끝에 성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방문에 이어, 기재위원장인 윤후덕 의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장인 우원식 의원이 장점마을 현장에 방문하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장점마을 참사 해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금강농산에 도착한 윤 의원과 우 의원은 먼저 장점마을 주민들을 만나 깊은 위로를 전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소수의 주민대표들이 참석했다.

현황 브리핑을 마친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기에 앞으로 장점마을이 환경 참사의 완벽한 치유·회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장점마을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이므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후덕 기획재정부위원장은 "김수흥 의원의 눈물의 호소에 감동해 꼭 방문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됐다"며 "기재위원장으로 피해 주민들의 상처가 하루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시스템 구축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보통 환경문제로 인

한 참사가 벌어지면 의로운 싸움에 지치고 더욱 큰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장점마을은 김수흥 의원이 함께 해서 외롭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완벽한 치유가 이뤄지는 모습을 꼭 보고싶다"고 말했다.

김수흥 의원은 "두 의원의 진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 장점마을을 치유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며 "가장 시급한 손해배상 민사조정에서 모든 주민이 동의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김운덕 의원 '소상공인 보호·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구체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운덕 의원은 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김운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이용호 의원 '취약계층 의료비 신속지원법' 대표 발의



치료비가 급히 필요한 환자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즉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애초에 이 법안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실손보험과 대상이나 아니냐를 두고 벌어져 온 갈등과 수많은 환자들의 피해 호소 때문에 고안한 것"이라며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점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고위험성병원체 취급 실험자 안전 확보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3등급 시설 재인증 획득

전북도동물위생시험소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한 생물안전3등급(Biosafety Level 3, BL3) 연구시설에 대해 지난 5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BL3 등급(Biosafety level 3,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은 생물학적 위험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고위험성병원체를 취급하는 실험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안전 장비와 물리적 밀폐의 조합으로 이뤄진 음압 실험실

을 말한다. 이처럼 엄격한 조건이 필요한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은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주기로 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상태를 확인·점검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북도동물위생시험소는 이로써 지난 2011년 12월 26일 최초 인증 후 3 번째 재인증을 받게 됐다. 시험소는 재인증을 위해 설치·운영 기준에 적합하도록 1억4000만원을 투자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및 자동제어시스템을 보

완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연구시설 관리·운영기록 및 검증보고서로 1차 서면 심사 후, 2차 질병관리청 현장실사 검증을 통해 재인증 절차를 이행했다.

시험소는 이번 생물안전3등급 재인증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신속한 진단체계를 유지 관리해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재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도 시험소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의 고위험성병원체로부터 실험자를 보호하고, 병원체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을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자치분권 2.0 시대 실질적 실현 기원

송하진 도지사,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 동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8일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에 따른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마음을 담아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중앙과 지자체에 초점을 맞춘 단체 자치 중심이 '지방자치 1.0' 시대였다면, 이제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경찰조직법칙 75년 만의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대내외에 전파하고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된 온라인 캠페인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소망 등 핵심 메시지를 작성해 사진으로 촬영, 이를 SNS에 게재 후 다음 챌린지 참여자들

지명하는 방식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전라북도에서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전북도에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여려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의 지명으로 동참한 전북도 송하진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충북도 이시종 지사를 지명했다.

/유호상 기자

제4기 삼락농정위원회 이달부터 가동

172명으로 구성... 도내 국가기관 전문가들 참여로 전문성 강화

전북도가 보람받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사는 농촌 실현을 위한, 제4기 삼락농정위원회를 정책발굴 전문단 위주의 운영협의회 및 분과(10개) 172명으로 구성하고,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삼락농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민선 6기에 처음 출범한 농어업인이 직접 주도하고 행정부 협력하는 지방농정 거버넌스이다.

위원회는 지난 6년 동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농민공익수당 등 차별화된 전북만의 삼락농정 정책을 성공적으로 발굴 정착·발전시켰다.

특히, 농민공익수당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농업인·전문가·행정부 협력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한 이후 2년간 TF운영(18회), 운영소위(7회), 도민 설명회(4회) 등을 추진했다.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10만17천여 농가에 60만원씩 643억원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해 '전북도 삼락농정대상'을 제정하고,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 해온 농어업인 등을 발굴하고, 삼락농정대상을 시상해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제3기 삼락농정위원회는 농민정책, 농촌활력, 식량 등 10개 분과와 운영협의회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0회 이상 회의 및 포럼 등을 통해 지난 6년간 신규 시책 96건을 발굴하고 예산을 반영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제4기 위원회 172명의 위원은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와 협의해 단체별 임원진 참여 확대, ▲여성농업인 신규 시책 발굴을 위해 여성을 57명(44%)로 대폭 증원, ▲농촌진흥청 등 도내 국가기관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위촉직 위원 133명 중 신규 위원을 69명(53%) 구성,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해 정책화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6년간 추진한 삼락농정위원회는 도민과 함께 하는 협치 농정 실현에 성공적인 계도에 진일보 상당히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며 "이번에 구성된 제4기 위원회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대응과 첨단 농생명산업의 핵심기지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